

데스크 시각



송기동
예향부장·편집국 부국장

"삼의사(三義士)의 죽음은 봉건제도 개혁과 나라를 위한 값진 희생이었다. 그리고도 패가망신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해 주 최 후 손들은 조상들의 애국정신을 열심히 교육하였고 생활이 어려웠을 때도 일본인에게는 전답을 팔지 않았으며 일제강점기에는 마을에서 농작 놀이 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였다."

지난달 29일 무안군 해제면 석용리 석산마을 입구에 세워진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해 주 최씨 삼의사 실적비' 비문 일부다. 앞서 1973년에 후손과 마을 주민들은 같은 자리에 직접 '삼의사 실적비'를 건립했고, 이번에는 새로운 중장비와 승모단(崇禔團)을 세웠다.

"봉건 세력과 탐관오리들의 횡포와 열강들의 침략 야욕에/ 분연히 맞서 싸운/ 당신들의 고귀한 뜻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꿈꿔 온 사람이 곧 하늘인 세상을/ 우리가 꼭 이루겠습니다."

무안군 '밀리터리 테마파크'에서 멀지 않은 동탄면 다산리 차외마을 앞 도로변에 '동학농민혁명지도자 김응문·김효문·김자문·김여정 현장비'가 세워져 있다. 그 왼편에는 현장비 건립 추진위원회 명의의 '조그마한 독 하나를 세우며'라는 제목의 문장이 새겨져 있다.

삼의사는 석산마을 출신 동학농민혁명 지도자인 민제(敏濟) 최장훈(문빈)과 청파(淸波) 최선현(이현) 형제 그리고 사촌인 춘암(春菴) 최기현 등 세 분을 일컫는다. 독을 막아 형성된 '민대들'로 불리는 석대마을

민대들에 삼의사(三義士) 비를 세운 까닭은

앞 들녘은 129년 전 무안 동학농민군의 훈련장이었다. 마을에는 동학군이 목을 축였던 '방정' (芳井) 샘도 그대로 남아 있다. 마을 입구 이정표에 '동학의 땅'이라 돼 있고, 도로명 주소 또한 '동학길'이다. 김응문 일가(김응문·효문·자문 형제와 아들 여정) 또한 무안의 대표적인 동학농민군 지도자였다. 형제와 부자가 함께 참여한 무안 출신 동학 지도자들의 의로운 삶을 새긴 비를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129년 전 나주와 무안 일대에서 벌어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함께 일본군의 만행을 생생하게 접하게 된다.

무안은 전라 서남부 지역 동학의 주요 거점이었다. '전봉준을 능가하는 거교(巨峯)'로 불린 배상옥 장군이 이끄는 무안 동학농민군은 1894년 11월 17~24일(음력) 나주 읍성에서 직선거리로 10여km 떨어진 고막포 일대에서 나주 수성군과 혈전을 벌인다. 삼의사도 석산마을 '민대들'에서 훈련했던 농민군을 이끌고 현경과 무안읍을 거쳐 나주로 향했다. 김응문 장군 일가와 고막포 전투에 참여했다. 동학군 수는 5만~6만 명, 수성군은 3000여 명 규모였다. 동학군이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대포와 소총 등 현대식 무기를 갖춘 수성군의 화력을 회승총과 시석(矢石), 축장만으로 이길 수 없었다.

치열했던 1894년 11월 '고막포 전투'

고막포 전투에서 패배한 동학 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 민보군에 쫓겼다. 관군은 무안을 '붉은 고개' (붉은 잔등), 청계면 창포 '바우백이', 삼향면 '마갈잔등' 등지에서 동학군을 무자비하게 살육했다. 붙잡은 동학군들을 무안을 '불무다리'에서 처형하고 인근 '차발머리'에서 시신을 겹겹이 포개어 불태웠다. 또한 삼의사를 비롯해 13살 '소년 장수' 최동린 등 783명 이상의 동학 지도자급들이 일본 정토군(동학 토벌대) 본부인 나주

순사청으로 압송돼 처형됐다.

김희태 전(前) 전남도 문화재전문위원의 연구 논문 '동학농민혁명군의 나주로의 압송과 처형'에 따르면 일본 동학토벌대는 동학 지도자급을 나주 순사청으로 압송하도록 지시한 후 총살, 돌살(突殺·작정하고 찔러 죽이는 것), 타살(打殺), 소살(燒殺)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죽였다.

무안 동학 역사 기억하고 계승해야

후손들이 비를 세운 까닭은 129년 전 조상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함이다. 실적비와 현장비에서 후손들의 자긍심이 느껴진다. 오는 10월에는 나주시에 동학 관련 새로운 비가 세워질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세우는 '나주 동학농민군 희생자를 기리는 비'다. 이러한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밝힌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이 수 없습니다"라는 역사 인식과 대조를 이룬다. 지난 2017년 12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 옛 표본 창고에서 방치된 채 100년만에 발견돼 반환된 진도 출신 동학 지도자의 두개골 사례처럼 직계 후손 찾기는 요원하기만 하다.

최근 동학 경전인 '동경대전' (東經大全)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 등 동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0년간 동학을 연구해온 박맹수 전 원광대 총장은 '왜 지금 다시 동학인가?'라는 물음에 "문명의 대전환,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갈 지혜가 동학에 있다"고 밝힌다. 129년 전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산야에서 스러져 버린 수십만 명의 무명(無名) 동학농민군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되살려 내야 할 것이다. / song@kwangju.co.kr

은펜칼럼



박흥근
포유건축 대표·건축사

집이나 건물을 지었거나 지을 자리를 '터'라고 한다. 터를 잡는 행위는 건축의 시작이다. 좋은 터는 높은 안목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 보이는가 보다. 다수가 초기에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곳을 '건축이 완성되고 콘텐츠'가 채워지고 나서는 아주 좋은 터를 잡았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그런 사례가 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뮤지엄 산'이다. 이곳의 터와 건축, 건축가와 건축주에 대해 생각해 보자.

첫째, 터다.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술관의 위치와는 사뭇 다르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쉬운 곳에 미술관은 대부분 들어선다. 그런데 깊은 산속에 택했다. 산속이라 자연 풍경이 좋다. 풍경을 배경으로 활용했다. 미술관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유를 하지 않았다면 이곳을 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적이 드문 산중의 터를,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소로 만든 것이다. 이 미 만들어진 좋은 터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더 좋은 터가 될 곳을 찾아 만든 것이다. 선견지명이다.

둘째, 건축이다. 산을 보호한다고 그대로 두던 산은 산일뿐이다. 그러나 절대자가 만든 자연에 인간이 호

터·건축·건축주 그리고 건축가

과적으로 개입하고, 적절히 조절한다면 좋은 문화 행위이고 문명의 기초가 된다. 인간 행위의 결과는 건축으로 나타난다. 불국사 석굴암을 비롯한 산속의 수많은 사찰을 보면서, 지금 그렇게 조성한다면 모두 자연 훼손이라는 이점으로 큰 반대에 직면하게 될 사업들이다. 이는 하늘이 준 자연을 인간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인간이 '쌓고 세운 것' (建築)도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나면 자연스레 자연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곰곰이 들여다 봐야 할 부분이다.

셋째, 건축주다. 산속에 미술관을 짓겠다고 한 것을 보면 건축주의 시선 높이를 짐작할 수 있다. 고(故) 이인희 한솔문화재단 이사장의 안목이다. 다수가 첫 단추와 같은 장소 선택에 대해 염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건축과 콘텐츠의 힘을 아시는 분이었던 것 같다. 결국, 성공했다. 많은 사람이 이 번 곳을 찾아온다. 찾고, 머물고, 알리고, 다시 온다. 사업가로 살아오신 분이 장사의 기본은 '목'이란 것을 아실 것이고, 이미 형성된 곳도 있지만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 같다.

넷째, 건축가다. 건축주의 높고 큰 꿈도, 구체적인 실현해 줄 합당한 건축가(사)를 만나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건축주는 이를 잘 알아야 하는데, '뮤지엄 산'의 건축주는 이를 잘 알고 계산 분으로 보인다.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안도 다다오'를 택했다. 그는 일본의 버려진 섬 나오시마에서 이미 건축과 콘텐츠로, 성공의 경험이 있는 건축가다. 뮤지엄 산은 주차장부터 미술관 건물까지, 터 전체와 건축 내외부를 모두 미술관으로 설계했고, 유명해졌다. 건축가의 능력이고, 이를 수용한 건축주의 그릇 덕분이다. 건축은 건축주 수준

그 이상을 넘을 수 없고, 건축가의 능력과 열정, 사명감이 더해져 이루어진다.

여기, 이 지역은 어떠한가? 여수에 '예술마루'라는 문화공간이 있다. GS칼텍스가 후원하고, 능력이 검증된 '도미니크 페로'라는 건축가가 참여했다. 저평가된 산속에 문화공간 터를 잡았고, 산과 주변에 잘 어울리는 건축물을 세웠다. 건축주의 탁월한 선택 결과이고, 운영도 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의 시작과 끝에는 능력 있는 건축가와 현명한 건축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결과 명소가 되었다.

건축물이 완성되는 과정은 교향악단의 명연주가 진행되는 모습과 유사하다.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되기도 하지만 명지휘자를 선택하기도 한다. 행정에서는 행정의 실무자가 건축주 역할을 대신한다. 그의 의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리기도 하는 것을 봐왔다. 기업에서는 총수의 지시에 따라 담당 상무나 전무가 한다.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은 주인이 직접 행한다. 그들의 시선의 높이에 따라 터를 잡고, 콘텐츠가 구성되고, 건축가를 선택하고, 완성된다. 완성되는 과정은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 결과물인 건축물은 오랫동안 인간들의 삶을 담고, 녹이고, 쌓으면서 문명의 기초가 된다. 이는 그 지역의 경쟁력으로 되돌아온다.

건축주,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건축가로 선택을 받아 지휘하는 사람, 교향악단의 단원 같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단순 용역(?)이 아닌 내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유산을 만들고 있다는 사명감을 잊지 않아야겠다. 쉽지는 않지만.

'교육 혁신'은 왜 실패했는가

정부 통계나 국제 전문 기관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 관련 지표가 갈수록 추락하는 추세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조사한 교육 지표 중 한국은 63개국 중에서 27위를 차지했다.

한국 공무원들은 정책 실패 원인 분석에 인색하다.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관례도 한 몫한다. 다음으로 교육 전문성 부족이다. 이는 시대 흐름에 따른 교육 변화 본질 요소에 대한 고찰 부족, 정책 기획자의 성급하고 현장 감각 부실, 충분한 소통과 합리적 대안 부재, 핵심 요소인 실행력 부족 등이 꼽힌다.

우선, 인구 절벽 시대에 대비한 교육 정책은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전국에서 초등학교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120개교나 된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입학생이 없어 폐교가 나왔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26개 지자체 중에서 136개(60.2%)가 출생아 수가 1000명 미만이다. 최근 어린이집 폐교나 소아과·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챗GPT의 등장으로 교육 현장도 시달릴적이다. 로봇·인공지능(AI)·드론 등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메타버스에도 주목해야 한다. 디지털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넘나들며 지구촌의 변화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공개 수업인 무크(MOOC)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평생 교육 시대 진로와 직업, AI 교육에

대학도 지자체와 손잡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학들도 반도체·인공지능·디지털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학과 개편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블랙홀을 막을 방안은 충분하지 않다. 이는 지방 소멸에도 직결된다.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의 양극화를 메타버스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 지원 방안 중 '특수 목적 재정 지원 사업'이 대학의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게 대학 생태계를 바꿔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제도 정비를 도와주면 어떨까. 최근 한 지방 사립대학이 '농생명 연구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맞는 반려동물 종합병원이나, 바이러스 소(殺)처분 당하는 가축을 위한 연구 사업 설계가 신선하다는 반응이다. 농생명이 인공지능과 로봇, 반도체 디지털을 접목하고, 메타버스로 무장하면 경쟁력은 충분하다.

한국 사회의 학벌 구조와 임금 구조 양극화를 줄이는 등 사회적 문제도 급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 등 관계 장관 회의에서 핵심 과제에 설정할 과제다.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정책을 넘어,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 학부모와 교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5·18 43주년...광주 찾는 여야 협치 물꼬 트고

해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다가오면 여야 정치권은 앞다퉈 광주를 찾는다. 5월 정선 계승을 약속하며 호남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다. 43주년을 맞는 올해도 추모와 다짐의 발길은 어김없이 이어질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이어 올 기념식에도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 그제 윤리위원회를 열고 '5·18 정선 헌법 수록 반대' 등의 결사항을 밝힌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기념식에서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특히 대선 후보 시절 '5·18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5·18정신은 헌법의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만큼 이번 기념식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인지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도 5·18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대선·지방선거 패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 2021년 전당대회 동 분투 의혹까지 불거졌는데도 제대로 된 성찰과 반성 없이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가 하락하는 추세여서 민심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당·공천 현안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5월 정선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실천해 나눔과 연대의 대동(大同) 세상을 여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민생을 외면한 채 극단의 대결 정치로 사사건건 정변총출을 하고 있다. 정쟁만 남무하는 정치 현실은 5월 정선 앞에 무색하기 짝이 없다.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여야는 경제난과 전세 사기 사태 등 민생 현안 해결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을 위한 해법을 모색, 협치와 국민 통합의 물꼬를 터야 한다. 그것이 5월 정선을 실천하는 길이다.

곰팡이·오물 얼룩진 추모 시설 관리 강화해야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전국에서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광주 지역 5·18 관련 시설 관리가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일보 취재팀이 그제 기념·추모 공간들을 직접 찾아가 보니 서구 치평동 5·18기념공원 내 지하에 마련된 추모 승화 공간은 습기 때문에 천장과 바닥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지난 3월 말 전두환 씨의 손자인 우원 씨가 사죄를 위해 광주를 방문했을 때 들른 곳이다.

습기 제거를 위해 광주시는 하루 최대 제습량 80ℓ 용량의 제습기 두 대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3310㎡ 규모의 추모 공간 내 습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공인 업체에 견적 요청한 결과, 추모 시설은 곰팡이가 잔뜩 끼자 페인트칠로 임시 조치를 하기도 했다. 올해도 유공자 이름이 새겨진 명패들에 검은 얼룩이 져 있었다.

광주시가 지난 2019년 원형을 보존해

역사 체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옛 505보안부대 건물 또한 방치되고 있다. 입구 위빙소 건물 유리창은 깨어져 있고, 내부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내부반과 분관, 면회실 등도 공사 자체가 안 돼 방치되어 있다. 광주시는 흥남순 변호사 가족과 적십자 병원의 리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하느라 옛 505보안부대 건물 공사 예산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받기 위한 엘리베이터 공사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5·18 기념·추모 시설은 광주의 또 다른 얼굴이다. 전국 각지에서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이 곰팡이와 오물 속에 방치된 5·18 관련 공간을 본다면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광주시는 이들 시설에서 추모객들이 '오물 광주'를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서둘러 정비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군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방법은 임관 서명장, 신분증, 전역증 등이 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계급과 상관없이 통용되는 신분증은 흔히 군번줄로 불리는 '인식표' 하나뿐이다. 군번줄이 '전사(戰士)의 신분증'이라 불리는 이유다.

우래는 로마 병사들이 가족으로 된 작을 때에 이름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담아 목에 걸고 다녔던 '시그나클루'이다. 서기 295년 테베스테의 막시밀리아누스는 로마군에 징집되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다 체포돼 시그나클루를 받아들여든지 죽음을 택하라는 종용을 받았다. 그는 결국 시그나클루를 거부하고 참수형을 선택해 기독교 순교자로 남았다.

군번줄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미국 남북전쟁 때다. 대량 살상무기의 등장으로 62만 명이 전사했는데도 신원 확인률이 58%에 그치면서 장병들이 스스로 버릴 등에 개인정보를 새겼고 발빠른 사업가들이 상업화했다. 1870년 프랑스와 프러시아 사이에 '보물 전쟁'이 벌어지자 프러시아 군이 정식으로 '훈데마르켄'(Hundermarken)이라는 인식표를 지

급했다. 개 목걸이라는 뜻으로, 현대식 군번줄로 불리는 '도그 태그'(Dog Tag)의 전형이다. 이후 1차 세계대전때 영국, 캐나다 등 각국이 도입하면서 일반화됐다. 국내에선 한국전쟁 당시 승진 군인들의 신원 확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남북 합의에 따라 2018년 강원도 철원 비무장 지대 내 화살머리 고지에서 처음 유해 발굴이 이뤄졌는데 한국 군인과 프랑스 군인이 군번줄로 신원이 확인돼 65년만에 유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말 육군이 논란을 일으킨 '22년 군번' 4916명에게 '23년 군번'을 부여하는 잘못을 나몰라림을 거부하고 참수형을 선택해 기독교 순교자로 남았다. 군번줄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미국 남북전쟁 때다. 대량 살상무기의 등장으로 62만 명이 전사했는데도 신원 확인률이 58%에 그치면서 장병들이 스스로 버릴 등에 개인정보를 새겼고 발빠른 사업가들이 상업화했다. 1870년 프랑스와 프러시아 사이에 '보물 전쟁'이 벌어지자 프러시아 군이 정식으로 '훈데마르켄'(Hundermarken)이라는 인식표를 지

지질러 논란이 됐다. 입대일 기준으로 정해지는 군번을 실수로 수료일 기준으로 설정했다는 것인데 이후 조치가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장병들은 배지된 부대에서 후임과 선임병을 놓고 다툼이 일고 전역 후 군인 적금 등에서 피해 가능성이 있는데도 육군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번도 제대로 못 달아 주는 군 지도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정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bungy@

기고



문승태
순천대 사범대학 농업교육과 교수

교육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쳤다. 신정부는 혁신이나 혁명이라는 단어로 교육 정책을 포장했다.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국정 과제에 담은 것도 표시 잡기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교육 정책은 대부분 대통령 임기 기간 중 현장에 정착하지 못했다. 현장 검증 부족과 실행력 없이 조급하게 설계된 정책은 대부분 시범 사업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자취를 감춘다.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 몫으로 돌아간다. 이런 결과,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들의 불안과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 개혁(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행력'이다. 정책 분석과 비판 대상은 교원이 아니라 정책 내용과 도입 방식에 있다. 충분한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는 정책 도입이 가장 큰 원인이다. 어떤 혁신도 의미가 공유되지 않으면 공감과 신뢰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